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부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3. 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3. 15.
기획행정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기획조정실)
- 제출일자: 2023. 3. 3.(금)
- 회부일자: 2023. 3. 3.(금)
- 검토기간: 2023. 3. 3.(금) ~ 3. 9.(목)

##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규제입증책임제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자치법규상 근거 규정을 반영하고,
- 규제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세부적인 규제심사 절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규제개혁 운영 조례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 범위(안 제1조~제2조)
- 규제의 원칙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규제입증책임제 및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제11조)
  - 임명 또는 위촉대상 구체화
  - 위촉위원 임기 변경: 2년, 한 차례 연임 → 2년, 두 차례 연임
- 규제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2조)
-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련법령 및 현행조례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행정규제 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입법예고(2023. 2. 1. ~ 2. 21.) 결과: 의견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결과(2023. 2. 28.): 원안가결

####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항 제3호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규제개혁 업무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안 제명을 개정조례의 목적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음.

- 안 제1조는 규제시책 추진과 규제 정비를 위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는 개정조례안의 적용 범위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와 규칙으로 한정함.
- 안 제3조에서 규제의 원칙은 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신설·강화되는 중요규제에 대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기존규제 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선·폐지하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심사범위,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는 규제개혁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을 위한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포상 근거를 마련 하였음.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전부개정안은 글로벌 경기침체상황에서 주민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폐지·정비하고,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규제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한편,
- 규제 신설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 기존 규제의 전면 재검토와 규제개혁 상설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유와 경쟁을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상위법령과의 연계성,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의 전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관 계 법 령 】

###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  
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  
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  
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  
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  
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  
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

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를 제1항에 따른 규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현행 조례 】

### □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4)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구의회 의원 4인을 포함하여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인을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